

기업은 시민이 될 수 있는가?

- 기업 시민 이론과 조직이론 리뷰를 통한 분석 -

전지윤*

국문요약

본 연구는 기업시민 이론의 등장 배경과 핵심 관점, 주장을 분석했다. 최근 ‘기업시민’이란 용어는 최근 CSR 영역뿐만 아니라 국내외 언론자료, 기업사회공헌 보고서, 연구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기업시민’이란 용어는 주로 대기업들에 의해 친근한 동료 시민의 메타포처럼 사용되고 있으며 본 개념의 역사적 계보와 문제의식, 핵심 관점에 관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기업시민 이론이 등장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둘째, ‘기업은 시민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기업시민 이론과 조직이론에 대한 연구 문헌 리뷰를 통해 답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기업시민 이론은 포스트모던 국가 시대에 사적 영역과 공적영역을 분리된 공간으로 가정한 경영 이론들이 기업의 글로벌 경영활동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추동되었다. 또한 기업시민 이론, 조직이론 리뷰 결과 공동체주의, 보편적 윤리관점과 조직이론 중 자연-개방체계 관점이 기업을 정치참여자이자 행위자의 역할을 하는 시민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주요어 : 기업시민, 기업시민 이론, CSR

* 성공회대학교 구로마을대학, 초빙교수, jjjj2300@naver.com

Can Corporations can become citizens?

- Analysis through review of corporate citizenship and organizational theory-

Jeon, Jiyun**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background, core perspectives, and arguments of corporate citizenship theory. Recently, the term "corporate citizen" is used in various ways, including not only the CSR area but also media,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reports, and research. However, in Korea, the term "corporate citizens" is mainly used as a metaphor for fellow citizens to customers by large corporations, and it is difficult to find domestic studies on the historical genealogy, critical research questions, and core perspectives of this concept. Therefore, two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unfold. Firstly, it explains the specific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corporate citizenship theory. Secondly, the study throw a fundamental query 'Can company becomes a citizen?' and answer it through a review of literature on corporate citizenship theory and organizational theory. In conclusion, corporate citizenship theory was driven by criticism that management theories assuming private and public areas as separate spaces in the postmodern national era did not sufficiently explain companies' global activities. In addition, communitarian political view, universal ethical perspectives, and natural-open system can feasibly analyze corporations as citizens who act as important political participants and actors.

Key words : Corporate Citizen, Corporate Citizenship, CSR

** Sungkonghoe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Seoul, Korea, jjjj2300@naver.com

I. 서론

구소련의 붕괴, 베를린 장벽의 개방으로 냉전 시대는 종식되었다. 이후 자본주의는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Santoro, 2010).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확산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이슈들을 낳았다. 국가와 기업, 사회와 기업 간의 관계에도 기존의 언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영역이라고 인식되었던 활동에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Logsdon & Wood, 2002; Moon, 2014). 이는 자원의 분배, 복지서비스의 제공, 국가 기준보다 높은 노동환경 보장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또한 기업은 막강한 자원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로비를 통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정치적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Sundaram & Inkpen, 2004; Detomasi, 2008; Scherer & Palazzo, 2012). 즉 기업이 공공영역과 주고받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경영학 이론에서는 기업의 정치적 참여, 행위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았다. 정치의 영역과 기업은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Friedman, 1962; McWilliams & Siegel, 2001).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다룬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하 CSR) 이론에서도 기업의 정치적 역할, 책임에 대한 고려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즉 도구적, 경제적 이익 중심의 CSR 관점에서는 기업이 마주하고 있는 최근의 변화를 포착해내지 못한다. 윤리적 관점에 기반한 이해관계자 이론, 규범적 이론 역시 근대 국민국가의 기업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 국민국가 시대의 새로운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화로 인하여 각 국가의 규제적, 규범적 프레임은 약화가 되었고 가치의 다차원성 역시 보편적인 기업윤리를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학적 관점으로 기업을 바라보고 기업 행위를 설명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치학의 영역에서 주로 다루었던 시민의 권리와 책임, 정치적 참여, 시민사회, 민주주의, 다원주의 등과 같은 개념들이 기존의 경영학 이론으로는 분석하지 못한 세계화 시대의 기업 활동,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기업 시민 이론은 정치학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었던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세계화 시대의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글로벌 규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물론 시민에 대한 설명도 어떤 정치철학에 기반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으로서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기업이 동료 시민에 대해 이행해야 하는 책임과 공공선에 대한 기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존중 등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두 가지로 구체화할 수 있다. 첫째, 기업시민 이론이 등장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해당 배경에는 역사적, 실용적 필요성이 내재되어 있다. 둘째, ‘기업은 시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한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은 기업시민 이론과 조직 이론에 대한 연구 문헌 리뷰를 통해 구체화하고자 한다.

II. 기업시민 이론 등장배경

2.1 세계화, 포스트국민 국가 시대

웨스트팔렌 조약에 기반한 세계질서가 흔들리고 포스트 웨스트팔렌 질서(Falk, 2001; Kobrin, 2001, Santoro, 2010), 또는 포스트 국민국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Habermas, 2001). 포스트 국민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국가 시스템이 과거와 비교할 때 규제 권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화 시대에 많은 사회적, 경제적 상호작용들이 국가의 사법권력이 작용할 수 있는 물리적 범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생산과 무역거래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됐으나 글로벌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정치적 제도의 발전은 뒤처지고 있다. 또한 국민국가는 기업 CSR의 중요한 의제인 인권, 노동권, 환경 이슈 해결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거나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의 정부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국가적 문제인 지구 온난화, 살림 파괴와 같은 문제를 마주하고 있으며 해당 이슈는 개별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동시에 UN, ILO, WTO와 같은 국제기구는 주권 국가에 대한 개입 불가 원칙과 규제 강제의 어려움, 국가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Scherer & Palazzo, 2012).

새로운 정치 주체들의 부상, 개인주의의 확산, 다양한 국가로부터의 이주 확대 등의 사회의 변화도 기존의 국민국가 질서에 영향을 주었다. 세계화 이전에는 비교적 통일적이었던 국민문화가 다양한 다문화적 커뮤니티들의 가치, 삶의 형태 등으로 인해 분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정치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기업이 마주하고 있는 사회환경 역시 다양한 가치와 다원적인 사회적 기대들을 내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원적인 사회적 요구의 확대와 국민국가 거버넌스의 약화는 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을 추동하게 되었다. 글로벌 NGO, 시민사회 그룹, 공공영역의 행위자들과 결합한 기업 또는 개별 기업 단독으로도 글로벌 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Schere & Palazzo, 2012). 동시에 NGO와 같은 비정부 기구는 과거에는 정부에게만 압력을 가했으나 이제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이들이 사회적, 환경적 이슈에 더 많은 책임을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기업은 국가의 보호 장벽이 없어지고 가속화된 경쟁에 놓이게 됐다. 국가가 독점하던 시장은 자유화되고 탈 규제화된 시장으로 대체됐다. 많은 기업은 투자자들에 의해서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압력에 놓이게 됐다. 기업들은 핵심 가치사슬의 물리적 장소를 옮김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따라서 몇몇 기능을 해외로 이전하게 됐고 기업의 속한 국가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환경은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진출국의 환경파괴, 노동 이슈 등 또 다른 문제점들을 낳는다. 한때는 국민국가의 거버넌스로 통제 가능한 영역이 이제는 기업의 재량에 넘겨진 것이다. 일부 기업은 NGO의 압력에 대응하고 국가 간 규제의 격차를 줄이고 거버넌스의 공백을 자발적인 자기 규

율로 매꾸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공선은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CSR에 대한 도구적, 경제적 가치 중심의 관점은 포스트 국민국가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기업의 역할과 사회 변화 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Logsdon & Wood, 2002; Schere & Palazzo, 2012).

2.2 기존 CSR의 관점, 이론의 한계

CSR에 관한 문헌연구는 다양하나 CSR에 대한 공통의 개념 정의가 부족하다. 그러나 주요하게는 도구적 관점의 CSR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Carroll & Buchholtz, 2014; Schere & Palazzo, 2012). 도구적 관점의 CSR 이론은 다음의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비즈니스와 정치는 명확히 구분된 분야다(Friedman, 1962; Henderson, 2001). 둘째,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며 관리자들은 기업의 주주에게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Sundaram & Inkpen, 2004). 셋째,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기업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될 때에만 고려해야 한다(Mackey et al., 2007; McWilliams and Siegel, 2001). 따라서 도구적 관점에서는 CSR이 CSP와 CSF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해당 관점에서는 사회의 공공선을 제공하고 이에 해가 되는 행위를 규제를 하는 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따라서 기업은 해당 목적을 위하여 시민사회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도구적 관점의 CSR과는 대조적으로 규범적 관점의 이론에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해 윤리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자 이론의 경우 기업을 행위에 영향을 주고 받는 행위자들의 동기와 요구를 관리하고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Freeman et al, 2018). 이해관계자 관리 관점은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관리 관점 역시 포스트 국민국가 시대에 기업이 마주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국가마다 상이한 제도와 사회적 규범, 가치체계 아래에서 보편적인 윤리로 이해관계자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기업이 뿌리를 두고 있는 근대 정치제도 질서의 변화를 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업이 국가의 경계를 벗어나 활동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다루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처럼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근대 국민국가 정부의 규제 시스템만으로 사회의 거버넌스를 구현하기는 어렵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국민국가 정부의 기업의 비즈니스 행위에 대한 규제, 공공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 역시 줄어들었다(Moon, 2014). 반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세계화 시대에 기업은 본 조직에 유리한 법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다국적(Multinational Coproation, MNC)의 경우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국가를 선택하여 공장이나 금융 시스템을 옮기고 이러한 지역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를 약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악화를 지속할 것이다(Detomasi, 2008).

2.3 CSR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

새로운 관점으로 기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회가 빠르게 변할수록 고정적이고 단일한 관점으로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CSR도 새로운 관점으로 이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기업 시민 이론도 그 흐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Schere & Palazzo(2012)에 따르면 CSR 영역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현상들은 다음 5가지 유형의 환경변화로부터 추동되고 있다.

첫째, CSR의 제도적 맥락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업의 행위에 대해 중앙 집중화된 권력이나 시장의 경쟁으로 압력이 가해졌으나 글로벌 사회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다(Bevir, 2012). 특히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MNC에게 국민국가 중심의 제도적 통제는 많은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글로벌 시대 이후 새롭게 발생하기 시작한 CSR 문제들에 대응하고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활동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기구, NGOs, 기업 간 네트워크,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업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응하고 있다(Bevir, 2012). 즉 기업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 국민국가 거버넌스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로 이동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CSR 연구는 기존의 관점으로는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던 이러한 현상을 적극적으로 이론체계 안에 포함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설명해야 한다(Detomasi, 2007).

둘째, 기업의 자기 규제(Self-regulation)로서의 CSR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도적 환경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국가 중심의 거버넌스로부터 글로벌 거버넌스로의 구조적 변화는 기업 행위에 대한 규제의 성격도 변화시키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구조환경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기업의 규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가의 법치 영역을 벗어났거나 진출국에서는 합법적인 행위이나 본 국가에서는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등에 대해서 규제를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규제에 대한 강조는 정부의 개입 없이 기업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Shelton, 2000). 그러나 기업의 일탈 행위 방지를 자기 규제에만 맡기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다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기 규제는 CSR 관련 논의에서 그 중요성을 확대해 가고 있다.

셋째, 기업의 법적 책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로 CSR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기업이 경제적,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자선적 성격의 책임까지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Schwartz & Carroll, 2003). 이러한 관점의 강조는 국민국가의 규제 약화로 기업들이 공급 사슬의 파트너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영향력을 악용하는 사례가 국내외적으로 증폭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기업이 조직의 공급 사슬을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적 외부효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된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연결성에 대한 강조는 소극적인 수준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확장된 범위의 CSR 활동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CSR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이론과 동료 시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시민과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CSR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연결성

에 대한 강조를 어떻게 기존의 이론 체계 또는 새로운 분석 틀 안에서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기업이 조직장으로부터 추구하는 정당성의 조건, 맥락이 변화하고 있다. 기업은 외부의 규범적 압력에 대응하고 생존하기 위하여 사회로부터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공통의 문화적, 인식적인 신념을 공유해야 한다(DiMaggio & Powell, 1983). 이를 통해 제도장으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국가 중심의 사회에서 글로벌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정당성의 성격도 달라지고 있다. 국민국가 맥락에서 기업들이 제도장 내에서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 제도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으나 글로벌 맥락에서는 기존의 규범적 프레임워크가 흔들리고 있다.

다섯째, CSR이 뿌리내리고 있는 정치사회 기반이 변화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발달과 확장, 새로운 수단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치적 행위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있다. 큰 흐름에서 분석해 보자면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참여민주주의로의 관점으로 나아가고 있다(Schere & Palazzo, 2012). 각 관점은 기업의 정치 참여에 대해 대조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기업은 사적 영역에 속해 있으며 정치 행위자가 되기 어렵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는 기업을 포스트 국민국가 시대에 사회적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CSR 이론이 기업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문적 토대에 기반하여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주의, 자유주의 정치학적 관점에 기반한 CSR 이론으로는 기업의 새로운 정치적 행위나 활동 등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 CSR의 환경 변화는 국가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기업 제도 환경의 변화, 정치사회 영역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과 기존 CSR 이론 사이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을 시민이라는 은유를 통해 바라보는 기업시민 이론의 관점은 변화하는 거버넌스 메커니즘, 기업의 자기 규제, 기업의 제도적 정당성의 변화, 새로운 정치 참여 형태 등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시민이라는 개념이 이론적으로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기업은 시민이 될 수 있는가?”

III. 기업시민 이론 리뷰

기업시민 이론은 비교적 최근에 CSR 연구 영역에 등장한 개념이다(Crane et al, 2019). 새로운 용어가 등장함과 동시에 다수의 기업들은 자신들을 ‘친근한 동료 시민’, ‘이웃’으로 드러내기 위해 기업시민이라는 단어를 홍보자료나 사회 공헌 보고서 등에 경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Wood & Lodgson, 2002).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비즈니스 활동을 홍보하는 수식으로 활용되거나(포스코경영연구원, 2022; 삼성전자, 2022) 사회 공헌 활동을 기업시민 관점으로 분석하는 연구들

(김용근·이정인, 2021; 구자숙·강혜선, 2021; 정정희, 2021)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시민 행동이 내부 직원의 업무성과(박세호·나인강 2013)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이수정·윤정구, 2013)에 대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문헌의 경우 기업시민 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철학과 관점을 반영하기보다는 ‘좋은 시민’으로서 기업이 수행한 CSR 활동에 대한 사례 연구나 인적 자원, 소비자 행동과의 연관성 분석에 집중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은 시민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시민권의 개념을 분석하고 이를 설명하는 다양한 정치학적 관점과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연결한다. 개념적 분석 수준에서 기업이 시민이 될 수 있다면 실제 현실에서 “기업시민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조직 관점을 통해 답하고자 한다. 중위 수준에서 제도이론을 통해 기업시민 이론에 대한 설명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거시적 수준의 개념과 실제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중위적 수준을 연결한다.

3.1 기업과 시민권

2000년대 초반 기업시민이라는 용어는 사회과학 연구자들과 기업 사이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떠올랐다. 기업이 시민과 동일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개념은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매력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개념이었다(Crane et al, 2019). 또한 기업시민 이론이 기존 CSR 관점과 차별되는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은 시민이라는 정치학적 개념을 통해 기업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론체계 안에서 기업이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동등한 시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는 보다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다. Wood & Losdon(2002)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기업시민을 전통적인 정치학적 개념인 시민권(Citizenship)과 연결하여 분석하고 있다. 기업을 시민으로 바라본다는 건 시민이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된 요소들까지 함께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과 시민을 이론적으로 연결하기에 앞서 시민은 누가 될 수 있으며 어떤 권리와 책임을 가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민권은 그 자체로 논쟁적이고 복잡한 개념이다(Crane et al, 2019). 정치학의 여러 학문적 계보, 관점에 따라서 시민권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국가개입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에서 바라보는 시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와 공동체의 공동선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의 권리는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인류 보편의 권리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가정하는 시민의 권리 역시 그 성격과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권이라는 개념 역시 어떠한 계보를 가진 학문적 토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은 보편적인 핵심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1> 시민권의 핵심 구성요소

구 분	내 용
지 위 (Stat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가 시민이 될 수 있으며 그 지위는 누구에 의해 획득될 수 있는지를 규정함
권 리 (Entitlement) (Marshall, 19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의 권리 • 정치 참여의 권리 • 복지의 권리
참여과정 (Pro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권은 시민의 사회참여를 의미하고 있음 • 단순한 투표권 행사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관점에서 시민의 개인적 발전과 사회변영을 위한 참여를 의미함

(출처 : Crane et al., 2003 표 재구성)

Crane et al(2003)의 설명에 따르면 시민권의 핵심 구성요소들은 지위, 권리, 참여 과정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우선 시민권은 사회구성원 중에서 누가 시민이 될 수 있는지를 지위를 통해 구분한다. 공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동등하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권은 특정 대상에게만 사회에 참여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따라서 시민권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지위는 시민권이 내포하고 있는 배제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 시민권은 시민으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사회구성원이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정치학자들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 시민이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다양하게 정의 내리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은 표현의 자유, 사유재산 보장 등을 통한 자유의 권리, 투표권을 통한 정치 참여의 권리,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Marshall, 1964). 셋째, 시민권은 사회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참여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 세 번째 구성요소는 앞서 설명한 두 가지 구성요소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시민권을 설명하고 있다. 사회에 대한 참여 과정으로서의 시민권은 단순히 개인에게 부여될 수 있는 투표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적 관점에서 시민은 사회 참여를 통해 개인의 발전을 경험하고 구성원들이 속한 사회의 변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권리 역시 갖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과 사회 양자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공공선을 창출할 수 있다.

시민권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법인격체인 기업이 인간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지위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권리의 측면에서도 개인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자유와 기업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의 영향력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개인의 자원과 비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직접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투표를 통한 정치 참여의 권리를 통해 기업을 시민으로 바라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복지의 권리 역시 다

른 사회 구성원과 동일하게 기업에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Crane et al(2003)은 시민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참여 과정의 권리를 통해 기업을 시민으로 설명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참여 과정 요소를 통해 기업을 시민으로 바라본다면 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 해당 관점으로 기업을 시민으로 바라본다면 기업은 사조직 자체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동료 시민, 커뮤니티, 환경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사회의 발전을 사회 참여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즉 기업이 공동선 창출을 위한 사회 참여, 정치 참여의 행위들을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3.2 정치학적 관점과 기업시민

시민권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적 관점에 따라 시민권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어떠한 관점으로 시민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시민권의 핵심 요소에 대한 해석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 간의 차이점은 기업을 시민으로 바라보고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드러난다. 즉 각각의 정치학적 관점들이 해석하는 시민권의 내용에 따라서 기업을 시민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것이다. 정치학적 관점도 패러다임과 철학적 토대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민권에 대한 정치학적 설명은 다음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Wood & Logsdon, 2002).

첫째, 최소주의·자유주의 관점이다. 최소주의 관점에서는 시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해당 관점에 따르면 시장,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의 이익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의 추구는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때에만 허용하는 게 적합하다. 이러한 관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강조 역시 클 수밖에 없다. 개인의 자유가 모든 가치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적 개입은 시민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주의·자유주의 정치학적 관점에 기반하여 기업을 바라본다면 비즈니스 조직은 시민이 될 수 없다. 기업은 하나의 인격체가 될 수 없으며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통해 구성된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즉 기업은 개인의 계약에 기반한 법적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이 '시민'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도 주주들이 자신의 이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이지 공동선을 위한 것은 아니다(Wood & Logsdon, 2002). 이러한 해석에 의거하여 본다면 기업은 시민이 될 수 없다.

둘째, 공동체주의 관점이다. 공동체주의 입장은 커뮤니티의 발전을 개인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한된 지형적, 윤리적 맥락 안에서의 시민권을 추구한다. 시민들이 공동체라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영역의 테두리 안에서만 동질적인 시민권을 향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에서 가정하는 시민권이 작동하는 지리적인 범위는 꼭 좁은 지역일 필요는 없으며 국가 단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은 공동체에 가져야 하는 의무는 집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공동체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공통의 역사, 경험, 문화에 기반한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 존재다. 개인은 자신이 기반하고 있는 공동체와 공통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동료 시민이 없다면 존재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동체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커뮤니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즈니스 조직을 분석한다면 기업은 단순히 개인 간에 맺은 계약의 합이 아닌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단위이자 사회 구성원으로 볼 수 있다. 기업 역시 조직이 기반하고 있는 로컬 커뮤니티에서 동료 시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통해 공동선을 창출하고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혜택을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최소주의, 자유주의 관점과는 대조적으로 공동체주의 관점에서는 지역적 맥락 안에서 기업을 기업시민 개념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셋째, 보편적 윤리 관점이다.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의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인식 향상과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시민과 같은 새로운 용어들도 부상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자연권에 기반하여 모든 인간은 공통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오래된 정치철학의 전통이 있었다. 또한 인간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보편적 관점도 있다. 그러나 기술, 통신의 발전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전 세계 인류는 공통의 이해, 감각을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윤리를 지향하는 정치학적 관점은 모든 인간은 자유가 있고 사회의 이익, 부담은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Wood & Logsdon, 2002). 이러한 주장은 1948년 2차 세계대전 이후 공포된 UN의 인권권리장전에도 구체화되어 있다. UN의 인권권리장전이 중요한 이유는 상세 내용에 대해 동의의 수준이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나 인간 기본 권리에 대한 상호 인정과 이해를 이루어냈다는 데 있다. 이는 국가, 문화를 가로질러 인간 권리에 대한 인류 공통의 언어가 있으며 세계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힘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동의된 보편적 인권에 대한 공통의 언어는 비정부 기구에 의한 사회적 통치에 힘과 정당성을 실어준다. 예를 들어 보편적 인류 권리를 위협하는 기업, 조직 등에 대해 비정부 기구가 시장 거래, 투자, 명성 위협, 미디어를 통한 압력 등으로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편적 윤리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본다면 기업시민은 커뮤니티 수준에서 좋은 시민으로서 책임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준에서도 좋은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정치학적 관점으로 시민권을 해석할 때 기업을 시민으로 이론화할 수 있는 관점은 공동체주의, 인류 보편적 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점으로 기업을 시민으로 가정할 때 시민권에서 정의하는 지위, 권리를 개인 시민과 동등하게 기업에게 적용하기에는 어색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Crane et al(2003)은 기업을 시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개념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민권의 요소는 사회에 대한 참여권이라고 보았다. 지위, 권리는 기업에게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갖고 있는 자원의 크기와 영향력은 개인 시민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사회 참여 측면에서 기업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공적 분야에 참여하고 공동체주의, 인류 보편적 관점으로 기업이 시민으로서 커뮤니티의 문제 해결, 동료 시민의 권리 존중, 커뮤니티를 위한 공공선의 창출, 인류 보편적 가치 존중

의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3.3 조직 관점과 기업시민

“기업은 시민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정치학적 관점은 이론적인 탐색을 통해 시민권과 기업의 연결성을 구체화한다. 그렇다면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당 개념은 어떻게 적용되고 설명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즉 “조직으로서 기업은 어떻게 시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거시적 수준의 기업 시민 개념과 중위적 수준의 조직으로서의 기업을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Scott & Davis(2015)가 제시한 분석 틀을 바탕으로 조직으로서의 기업이 시민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Scott & Davis(2015)는 조직을 합리체계(Rational System), 자연체계(Natural System), 개방체계(Open System)로 바라보고 조직이론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합리 체계의 관점에서 바라본 조직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도로 공식화되고 위계화된 합리적 집합체다. 조직을 공식화된 규칙과 규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료제로 구축한 과정(Weber, 2015)이나 조직의 생산성 극대화를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만든 과학적 관리 기법(Taylor, 2004)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조직이론의 발전 초기에는 합리 체계 관점이 중심이 되어 목표의 달성,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설계된 도구, 수단으로서의 공식 조직을 탐구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해당 관점에 의하면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나아가므로 비용의 절감, 효율성 증진, 성과 창출을 위한 최적의 구조가 필요하다. March & Simon(1993)이 조직을 특정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 집합체라고 정의 내린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따라서 조직의 관리자 역시 합리성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통해 조직으로부터 최대한의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합리 체계 관점은 기업과 외부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가정하나 이러한 환경에서 조직의 목표는 명확하다. 조직의 목표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성과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자연체계로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은 환경의 불확실성, 복잡성과 사회문화적인 요소 등을 강조한다. 해당 관점에 의하면 조직은 다양한 이해(interest), 비공식적인 관계 하위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다. 따라서 자연체계 관점에서 조직의 목표는 합리성과 성과 창출이라는 단일한 목표로 수렴되지 않는다. 오히려 조직의 생존 자체가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자연체계 관점에서 조직은 다양한 구성원들은 공식적, 비공식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진화하고 생존을 추구하는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당 관점으로 조직을 연구하는 이론가들은 합리 체계에서 가정하는 바와 같이 조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최선의 방법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Taylor가 주장한 과학적 관리기법처럼 보편적인 하나의 관리체계를 고안하는 것보다는 구성원들 간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와 규칙 같은 비공식적인 구조나 이들이 공유하는 공통의 가치, 관습을 발견하는데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Mayo(2004)의 인간관계론 개념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기존의 합리체계, 자연체계의 조직이론들은 조직을 환경과 분명한 경계를 지닌 폐쇄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조직 내의 행위자들과 구조에 분석을 집중했다(오석홍 외, 2019).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개방체계 관점은 조직 환경에 주목했다. 개방체계 관점의 등장은 환경의 변화와도 연결되어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그로 인한 경쟁의 심화로 조직의 생존을 위한 자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더불어 유형의 자원뿐만이 아니라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규범, 사회적 기대, 규제 등과 같은 사회,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는 연구들이 조직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오석홍 외, 2019). 특히 조직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단순히 물질, 인적, 재정적 자원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환경과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한다는 개방체계로서의 조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Hannan & Freeman(1977)의 조직군 생태학 이론, Pfeffer & Salancik(2003)의 자원의존 이론, Meyer & Rowan(1977)의 제도이론을 예로 들 수 있다.

Scott & Davis(2015)이 제시한 합리체계, 자연체계, 개방체계 관점은 “기업이 시민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각기 다른 설명을 할 수 있다. 조직과 환경은 분리되어 있으며 조직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수단이라고 바라보는 폐쇄-합리체계 관점에서는 기업을 시민으로 상상하고 현실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해당 관점에서 기업은 정치 행위가 일어나는 외부 환경 즉 공적영역과는 분리된 존재이며 효율성의 극대화와 경제적 성과 창출이 최대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직을 폐쇄-합리체계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기업이 시민 사회의 행위자로 참여하고 정치적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존재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조직과 환경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수용하고 있는 개방-합리체계 관점도 기업을 시민으로 상상하고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조명하기에는 많은 한계점들이 있다. 해당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은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개방-합리체계 관점의 조직이론들은 정치적 행위자로서 기업이 현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한 설명보다는 경제적 이익 창출을 목표로 두고 있는 도구적, 수단적 CSR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해당 관점에서 기업에게 CSR은 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화함으로써 기업의 이윤 창출과 합리성의 제고를 가져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조직과 환경의 상호 영향 관계에 주목하고 조직을 구성들의 공식, 비공식적 관계망과 공통의 문화 규범의 집합체로 바라보는 개방-자연체계 관점의 경우 기업을 시민으로 상상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 해당 관점에서 기업은 단순히 합리성을 가진 개인의 합이 아닌 주변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스스로를 조직화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 창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만 존재하고 활동하지 않는다. 기업은 조직이 속한 환경의 제도 즉 규범과 사회적, 문화적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은 제도환경 안에서 기업이 획득할 수 있는 조직장의 정당성과도 관련되어 있다(DiMaggio & Powell, 1983). 정당성의 확보는 조직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방-자연체계 관점으로 기업은 조직장 내의 정당성과 사회적 기대, 규범을 충족하기 위하여 시민으로서 존재하

고 행동할 수 있다.

3.4 제도이론과 기업시민

Scott & Davis(2015)가 제시한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을 통해 기업과 시민과의 연결성을 고찰할 수 있었다면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범위를 좁혀 구체적인 조직이론을 통해서 기업은 시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개방체계 관점의 조직이론 중 제도이론이 기업시민 이론에 대해 의미 있는 설명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방-자연체계 관점의 제도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조직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조직장 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정치적 행위 사회적책임 활동에 대해서도 해당 관점은 보다 유용한 설명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제도이론은 어떻게 조직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지를 핵심 연구 질문으로 삼고 분석하고자 한다. 제도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그러나 Scott et al(2015)에 따르면 제도는 규제적, 규범적, 문화-인지적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2> 제도의 정의

구분	규제적인	규범적인	문화-인지적인
근거기준 (Basis of compliance)	경험 (Experience)	사회적 의무 (Social obligation)	공유된 이해 (Taken-for granted Shared understanding)
규제근거 (Basis of order)	규정된 규칙 (Regulative rules)	공통된 기대 (Binding expectations)	구성된 개념 (Constitutive schema)
메커니즘 (Mechanisms)	강압적인 (Coercive)	규범적인 (Normative)	모방하는 (Mimetic)
논리 (Logic)	수단 (Instrumentality)	적절성 (Appropriateness)	믿음, 관습 (Orthodoxy)
지표 (Indicators)	규칙(Rules) 법(Laws) 제재(Sanctions)	인증(Certification) 인정(Accreditation)	보편적 믿음 (Common beliefs) 공유된 행동논리 (Shared logics of action)
정당성의 근거 (Basis of legitimacy)	법적인 허가 (Legally sanctioned)	도덕적 관리 (Morally governed)	문화적 지지 (Culturally supported)

출처 : Scott & Davis(2015)

제도이론은 조직이론에서 중간 수준의 분석틀로 주로 활용되었다. 제도이론이 정의 내리는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상호가 인정하는 하나의 유형이다. 그러나 유형으로서의 조직은 제도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즉 제도를 규제적, 규범적, 문화-인지적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조직 역시 다르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제도를 규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접근에서 조직은 공식적인 법, 규칙을 통해 정의될 수 있다. 규범적 관점에서 조직은 사회의 공통된 기대와 도덕적 규범을 통해 정의된다. 문화-인지적인 관점에서 조직을 바라보는 이론가들은 현대사회에서 조직 자체가 문화적인 구성물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합리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의 '합리성'이라는 것 자체는 현대사회문화가 만들어낸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문화-인지적 관점은 사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가치, 이해, 규범 등이 사회구성원들이 상호적으로 만들어낸 현실이라는 철학적 토대에 기반하고 있다.

제도이론의 여러 핵심 요소 중 정당성(legitimacy)은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기업과 시민과의 연결성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도이론은 조직 군 내의 개체 조직들의 역동성과 새로운 조직 개체군의 등장을 설명하기 위해 정당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즉 조직 형태가 조직장 내에서 문화적으로 규범적으로 정당성을 얻는다면 해당 형태의 조직은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초기 제도이론가들은 조직장 내의 동형화 현상에 집중하였으나 이후의 제도주의 연구가들은 조직들이 제도적 압력에 전략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이론가들은 제도이론과 자원 기반 이론을 결합하여 조직이 시스템을 바꾸고 조정하기 위해 조정, 회피, 대항 등의 전략을 쓴다고 주장했다(Scott & Davis, 2015). 즉 조직장 내의 모든 개체 조직들이 제도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동일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조직이 갖고 있는 자원과 전략에 따라서 환경을 조정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 환경은 조직장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조직장은 다양한 조직 개체들이 협력 또는 경쟁 관계의 다른 조직군들과 공통의 의미를 공유하며 활동하고 있는 제도적으로 구성된 틀이다(DiMaggio & Powell, 1983). 조직화란 반복되는 규칙, 관계, 정보, 자원의 교환을 통한 개체 조직 간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조직화 정도가 높아질수록 조직장 안에서 통용되는 공용의 가치, 의미, 사고 등은 구성 조직들에게 더 많이 공유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통의 프랙티스와 상징들이 생겨나고 이는 조직장의 운영 원칙들을 구성하게 된다.

제도관점과 제도이론에서 중요한 핵심 요소들을 통해 기업시민 역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기업시민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들은 제도관점으로 보자면 기업이 속해 있는 조직장의 제도 구조가 새롭게 구성되고 변형되어 간다고 설명할 수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경제적 책임과 최소한의 법적 책임만을 완수한다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조직장 내에서 생존해갈 수 있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 세계화, 포스트 국민국가 시대가 도래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해감에 따라 기존의 조직장에 제도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거시적인 제도 체제와 미시적 현실의 불일치에 의해 추동되었다. 국민국가 중심성에 기반하고 있는 법, 제도, 규범은 기업의 행위를 규제하는데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미 현실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규범, 문화적 가치들이 기업의 조직장에 압력을 가하고 이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 NGO, 시민들과 같이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여 기업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경계를 벗어난 제3국에서도 좋은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당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기업은 아무리 높은 이윤을 창출한다고 하여도 조직장 내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조직장에서 조직의 생존은 정당성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 관점에 기반하여 본다면 기업시민은 하나의 '제도'로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는 법, 강제적인 규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규범적, 문화-인지적 제도에 가까운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세계화로 변화되는 기업의 산업환경 내에서 조직장에서 통용되는 상호간의 기대, 규범, 문화, 논리가 변화해가고 있다. 국민국가 중심의 거버넌스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기 규제, 제3의 독립적 조직을 통한 규제 등이 기업의 사회적책임 추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런 변화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기업시민 이론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범이자 공통된 기대이기도 하다. 이는 조직장 내의 기업들이 마주하는 환경이자 제도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부상하고 있는 기업시민 이론을 제도이론으로 정리하자면 이는 조직장 내의 조직 개체들의 공유된 가치, 신념의 변화를 조직화하고자 새로운 환경의 영향이자 정당성을 얻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하나의 행동 양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IV. 결론

21세기 들어 기업은 사회, 정치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권력과 영향력이 축소되어 가는 국민국가 중앙정부를 대체하여 필요한 자원을 사회에 배분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행위자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발한 로비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은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증대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목격하고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정치적 행위들과 국민국가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활동 등에 대해서 기존의 경영학 이론은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기업과 정치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의 부재에 기인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 경영학 이론뿐만 아니라 현대 이론의 경우에도 기업과 정치는 분리된 영역에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했다. 따라서 정치는 기업이 참여할 수도, 참여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실 세계의 기업은 가시적, 비가시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영향력의 범위 역시 점차 넓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을 정치학적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했던 기업시민 이론은 기존 CSR 이론뿐만 아니라 경영학 전반에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기업은 시민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기존의 기업시민이론 연구, 조직이론 연구 등을 통해 답하고자 했다. 시민권에 대한 개념 분석을 토대로 불

때 기업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자유주의 정치철학 관점에서는 기업을 시민으로 보기 어려우나 공동체주의, 보편적 윤리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본다면 기업은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갖는 존재로 규정할 수 있다. 분석 단위를 중위적 수준으로 낮춰 조직 관점으로도 ‘기업은 시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 역시 제시했다. 조직 관점에 따르면 합리적-폐쇄체제, 자연적-폐쇄체제에서는 기업을 정치영역과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시민으로 가정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자연-개방체제 관점으로 기업을 바라본다면 기업은 정치영역의 참여자이자 행위자의 역할을 하는 시민으로 가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직 관점을 토대로 제도이론으로도 기업시민의 등장 배경, 제도로서의 기업시민을 분석했다. 따라서 본연구의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학문적 시사점으로 기업시민은 기존의 경영학 이론이 설명하지 못했던 기업의 정치적인 행동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시민’, ‘시민권’, ‘민주주의’, ‘시민사회’와 같은 전통적으로 정치학의 영역에서 주로 다루었던 개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정치적 행위를 분석하고 있다. 단순히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측면에서 기업 CSR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철학적 뿌리에 토대를 두고 시민으로서 왜 기업이 동료 시민과 공동체에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다. 반대로 기업시민 이론은 정치학에도 중요한 학문적 질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시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기업을 정치활동의 주체로 가정할 때 야기될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정치적 책임, 대표성의 문제 등은 정치학에서도 향후 중요하게 다루게 될 주제가 된다.

실무적 시사점은 기업을 시민으로 바라보고 이론화한다는 것이 실제 현실에서 기업의 자기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현실에서 다국적 기업은 본 조직에게 유리한 제도 체계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 진출국에서는 기업이 구축한 글로벌 가치사슬을 따라 자연 파괴, 노동착취, 인권유린 등의 부정적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 간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국민국가 중심의 제도는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기업 행위를 규제하는 데 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시민 이론이 이론적으로 주장하는 ‘시민’으로서 기업이 가져야 하는 동료 시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강조는 실제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시민에 대한 강조는 기업이 속해 있는 조직장의 제도 환경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제도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역시 시사한다. 기업에게 ‘좋은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시민사회 또는 공적 영역의 압력은 기업이 조직장 내에서 얻고자 하는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광범위한 관점으로 기업시민 이론을 다루다 보니 각 정치학, 조직이론이 갖고 있는 핵심 개념, 설명들의 반영이 부족했다. 또한 이론적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례연구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용근, 이정인 (2021),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 사례 연구: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마케팅 협업포탈 사례를 중심으로, *Korea Business Review*, 25(신년 특별호), 1-19.
- 구자숙, 강혜선 (2021), 건설 현장의 기업시민행동 : 포스코 A&C의 BIM 기반 3D 시각화 콘텐츠를 활용한 안전교육 사례, *윤리경영연구*, 21(2), 21-43.
- 박세호, 나인강 (2013), 기업시민행동이 인적자원성과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20(4), 1-18.
- 이수정, 윤정구 (2013), 기업시민행동인 CSR 활동이 종업원의 조직시민행동을 유발하는 조건과 과정에 관한 연구,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37(2), 1-39.
- 오석홍, 손태원, 이창길 (2019), 조직학의 주요이론, 파주.
- 정정희 (2021), 기업시민 경영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에 관한 연구: 포스코휴먼스 사례를 중심으로, *人文 社會科學研究*, 29(3), 274-294.
- Bevir, M. (2012), *Governance: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arroll, A. B., & Buchholtz, A. K. (2014), *Business and society: Ethics, sustainability, and stakeholder management*, Cengage Learning.
- Crane, A., Matten, D., & Moon, J. (2003), Can Corporations be Citizens?: Corporate citizenship as a metaphor for business participation in society, I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and Society*, 14, 105-115.
- Crane, A., Matten, D., Glozer, S., & Spence, L. (2019), *Business ethics: Managing corporate citizenship and sustainabilit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tomasi, D. A. (2007),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and global governance: modelling global public policy networks, *Journal of Business Ethics*, 71, 321 - 34.
- Detomasi, D. A. (2008), The political roo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82(4), 807-819.
- DiMaggio, P. J., & Powell, W. W.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47-160.
- Falk, R. (2002), Revisiting Westphalia, discovering post-Westphalia, *Journal of Ethics*, 6, 311 - 52..
- Freeman, R. Edward, Jeffrey S. Harrison & Stelios Zyglidopoulos (2018), *Stakeholder theory: Concepts and strateg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iedman, M. (1962), *Capitalism and Free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bermas, J. (2001), *The Postnational Constell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Hannan, M. T., & Freeman, J. (1977), The population ecology of organiza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5), 929-964.
- Henderson, P. D. (2001), *Misguided Virtue: False Notion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Lond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 Kobrin, S. J. (2008), Globalizati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future of global governance, In *Handbook of Research on Global Corporate Citizenship*, Cheltenham:Edward Elgar, 249 - 72.

- Mackey, A., Mackey, T. B. and Barney, J. B. (2007),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rm performance: investor relations and corporate strategi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2, 817 - 35.
- March, J. G., & Simon, H. A. (1993), *Organizations*, John Wiley & sons.
- Marshall, T. H. (1964),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Essays*, Doubleday.
- Mayo, E. (2004), *The human problems of an industrial civilization*, Routledge.
- McWilliams, A. and Siegel, D. (2001),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theory of the firm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6, 117 - 27.
- Meyer, J. W., & Rowan, B. (1977),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2), 340-363.
- Moon, J. (2014),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ogsdon, J. M., & Wood, D. J. (2002), Business citizenship: From domestic to global level of analysis, *Business ethics quarterly*, 155-187.
- Pfeffer, J., & Salancik, G. R. (2003),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s: A resource dependence perspectiv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Santoro, M. A. (2010), Post-Westphalia and its discontents: business, globalization, and human rights in political and moral perspective, *Business Ethics Quarterly*, 20, 285 - 97.
- Scott, W. R., & Davis, G. F. (2015), *Organizations and organizing: Rational, natural and open systems perspectives*, Routledge.
- Schwartz, M. S., & Carroll, A. B. (2003),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three-domain approach, *Business ethics quarterly*, 13(4), 503-530.
- Scherer, A. G., & Palazzo, G. (2012), The New Political Role of Business in a Globalized World—A Review of a New Perspective on CSR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irm, Governance, and Democracy, *Nachhaltigkeit*, 15-50.
- Shelton, D. (Ed.) (2000), *Commitment and Compliance: The Role of Non-Binding Norms in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undaram, A. K. and Inkpen, A. C. (2004), The corporate objective revisited, *Organization Science*, 15, 350 - 63.
- Taylor, F. W. (2004), *Scientific management*, Routledge.
- Weber, M. (2015), *Bureaucracy*. In *Working in America*, Routledge.
- Wood, Donna J & Jeanne Lodgson. (2002), *Business Citizenship: From Individuals to Organizations*, *Business Ethics Quarterly Ruffin Series*, 3, 59-94.

홈페이지

삼성전자

https://semiconductor.samsung.com/kr/sustainability/?cid=kr_paid_ppc_google_esg_none_se-m-esg_text_esg_%ED%83%84%EC%86%8C%20%EC%A4%91%EB%A6%BD

포스코경영연구원

<https://www.posri.re.kr/ko/board/subject/list/3/41>

논문접수일 : 2022년 1월 27일
심사완료일 : 2022년 2월 14일
게재확정일 : 2022년 2월 18일